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지역 내 산·학·연·관 22개 유관기관 참여... 업무협약 체결식

일자리 현안·새 일자리 방향 모색 등... 일자리창출 활성화 '기대'

도내 전략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맞춤형 취업 등을 위해 산·학·연·관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협력 기구가 구축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및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고, 산업별, 지역별 일자리 현안문제 논의, 기업의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체이다.

이번 거버넌스 출범으로 전북자치도 일자리 민생경제과가 일자리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22개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은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10개 일자리 유관기관 △수요 맞춤형 인력개발훈련 및 양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4개 인력양성기관 △산업체 일자리 수요공유를 위한 전북바이오융

합산업진흥원 등 5개 산업기관 및 단체 △일자리 정책 자문 및 분석을 위한 전북연구원 등 3개 연구·자문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출범식에서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산업화 진행,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 민선 8기 기업유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영상 제공을 통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미래산업과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통상진흥원은 통합 일자리 제공,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 고용 정보 제공,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발표해 도내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이날 각 기관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행방향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별로 전문가, 기업실무자가 참여하는 특화 산업분과를 운영해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했다"며, "산업별, 시군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및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하면 소풍도 돈이 된다'

전북자치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소풍 활용한 재생에너지 고체연료 이용 활성화 길 열어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풍 고체연료화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혁신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에서 추천된 105건 중 최종 17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국무총리상 1점(대상)과 장관상 16점(최우수 2, 우수 7, 장려 7)이 수여됐다.

전북자치도의 '소풍 고체연료화 사업'은 새만금 유역의 주요 환경오염 물질이었던 소풍을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기존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이 가축분뇨 100%로 제한돼 경제성과 수요 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혼합 연료화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하여 정부의 신기술 승인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3월, 발효·건조와 혼합 공법을 적용한 고체연료화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신기술 승인을 받았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도내 4개 시군에서 일일 680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김제연주축협 김제지원순환센터에서는 올해 6월부터 테스트베드를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H2 MEET 2024' 참가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수소산업 전시회서... 전북공동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수소 전시회인 'H2 MEET 2024'에 '전북공동관'으로 참가해 도내 예비 수소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25일~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며,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국제적인 수소산업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18개국에서 3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약 3만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는 등 글로벌 수소 산업의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TP)와 협력하여 '전북공동관'을 운영하며,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테라릭스(연료전지)와 (주)가이비(수소 저장용기 라이너) 등 14개 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한, 전주-완

주 수소 시범도시, 부안군 수소 도시 등 전북의 주요 수소 관련 사업들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은 수소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인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소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도시 조성(전주-완주, 부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공급기지 구축 등 도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동부권 공동현안 대응 정책협의회 개최

6개 시·군 권역별 공동현안 공유·지역 현안 아젠다 집중 논의

특별자치도 출범 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 권역별 공동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아젠다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장을 24일 무주에서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무주군 상상반디 숲에서 권역별 공동 현안 대응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공동 현안 대응 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및 재정지립도 감소 등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개별 대응에서 나아가 권역별로 공동으로 대응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획됐다.

첫 시작을 알린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인접 시군과의 연계 현안 및 동부권 발전을

위한 시군별 특화사업에 대한 논의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동부권 6개 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제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은 총사업비 6,600억 원(2011~2020년 연 300억 원/2021~2030년 연 36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1~2단계) 식품 10개 사업, 관광 분야 38개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3단계)는 포스트 코로나19 식품산업, 지역특화 관광, 문화 향유 저변 확대, 식품과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ICT 등 4개 분야에 걸쳐 3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동부권 6개 지역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운영 예정 2025년) 운영비 지원 △진안군 친환경 산악관광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무주군 상상 반디 숲에서 권역별 공동 현안 대응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진흥지구 지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별 반영) △무주군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위한 관심과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전북자치도에 요청했다.

또한 △장수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국도 26호선(진안~천천) 도로시설 개량사업 반영 협조 △임실군 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순창군 서부권 체

류형 관광레저시설 추진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동부권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및 재정지립도 감소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매일수목 권역이 하나 되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동부권을 연계한 풍부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기반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시군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도와 시·군에서 총 1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자치법규 실무, 행정소송, 민법 등 법제와 관련된 실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예

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과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생활 법률 상식(민법 중심),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